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본 남한의 대북정책과 북한의 도발양상의 변화 *

전 신 욱 (서경대학교)

요 약

지난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 22분경에 서해 백령도 부근에서 우리 해군의 천안함 침몰사태가 발생하였다. 이후 충격이 가라 앉기도 전인 11월 23일에는 연평도 민간인 거주지에 포격을 가하는 전쟁에 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들은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인들을 모두 경악하게 만든 사건이었다. 그리고 북한의 극악무도한 군사적 도발이라는 것에 국민 절대 다수가 분노하는 사건이었다. 분단 이후 현재까지 북한은 그들의 대남전략에 따라 대남공작과 대남도발을 끊임없이 자행해 왔다. 그리고 북한이 불시의 무력도발을 주기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대내정세의 분위기 조성과 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충성심 고양을 위함은 물론, 한국군 전투부대의 경계태세 파악 외에도 고위 군사정책결정과정의 민첩성과 합리성 그리고 대응방책 등을 포함한 위기관리 능력을 점검해 보는 기회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북한의 도발은 테러리즘과 대남 국가심리적 차원의 전술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북한은 폭력투쟁을 중지하거나 포기하면 북한 내에서 대남적대의식의 약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혁명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대처하는데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끊임없는 대남공작활동과 대남도발의 수위를 높여가는 것 같다. 북한의 대남공작은 한국과 주변국들의 정세에 따라 그 수위와 방법 등을 조절하며 치밀하게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 주제어: 대남무력도발, 공작과 테러, 무장간첩침투, 무장공비, 북방한계선, 핵과 미사일

* 본 논문은 「인간안보학회논총」 제3권 제1호(2010. 6)에 게재되었던 본인의 논문 “천안함 침몰사태를 계기로 본 북한의 대남도발: 사례와 대응방안”을 북한의 새로운 도발인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한 이후 그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I. 서론

최근 남북관계는 지극히 경색된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과거정권 10년간의 대북정책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바로 정립하고 새로운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정권의 무조건적 지원에서 조건적 지원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2009년 11월 10일에는 대청해전이 터졌었다. 북한 경비정은 서해 대청도 인근 북방 한계선(NLL)을 넘어와 우리 해군 고속정에 조준 사격을 했다가 2분여 만에 4900여발의 집중 포화를 맞고 침몰직전 퇴각한 바 있다. 이러한 도발 사건은 당시 “정상 회담에 반대하는 군부 강경파가 꾸민 사건” (북한 소식통)이란 관측이 있었다. 지난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 22분경에는 서해 백령도 부근에서 우리 해군의 천안함이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김정일의 장남인 김정남이 2010년 8월 말 김정일을 중국에서 만나 ‘김정은이 일으킨 천안함 사건’에 대해 항의 했다고 10월 14일 KBS가 보도함으로써 더욱 명확해졌다.¹⁾ 이와 더불어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단 구속 등은 북한이 작년 대청해전 패전 이후 대남강경 노선으로 급선회하면서 자행한 도발일 것으로 잠정 추정하고 있다.²⁾

이명박 정부 출범과 관련하여 북한의 대내, 대남전략을 보면, 2008년 신년공동사설에서 김일성 출생 100주년인 2012년까지 사회주의 강성대국³⁾의 대문을 열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대남정책분야에서는 2008년 4월 1일 이후에 대남적대노선에 입각한 ‘현 정부배제 정책’을 구사해 왔다. 2009년 11월 제3차 서해교전(대청해전)에

1) “김정남, 訪中 김정일에 ‘천안함’ 항의”, 「조선일보」, 2010년 10월 15일 A8면. 김정일의 등장과 함께 북한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 2009년 4월부터 시작된 인민 학대의 ‘150일 전투’와 연이어 벌어진 ‘100일 전투’가 있었고, 7월엔 남한에 대해 첫 본격적인 사이버 공격(DDos)을 가했다. 그 해 11월에는 인민을 절망케 한 화폐개혁을 단행하였고, 이는 희생양의 공개 총살로 이어졌다. 그리고 2010년 3월에는 천안함을 공격하는 거의 전쟁 수준의 도발을 벌였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김정일의 건강악화와 김정은이 등장하는 사이에 벌어진 것이다. “김정은과 함께 생긴 일들”, 「조선일보」, 2010년 10월 16일 A30면.

2) 북한은 대청해전(2009.11.10) 패배 이후 13일에는 군사회담 북측단장은 “무자비한 군사적 조치”를 하겠다고 발언하였고, 21일에는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황장엽 목을 따라”고 하였으며, 12월부터는 북한 군부의 “무력압박”이 본격화하였다. 12월 21일에 북한 해군사령부는 “북한군의 평시 해상 사격구역을 NLL 남쪽으로 내리겠다고 일방 선언한 바도 있다. 2010년 1월 15일 북한의 국방위원회는 ‘대남 보복 聖戰을 공언했고, 1월 27일에는 서해상에서 남측을 향해 해안포를 쏘며 한반도의 위기지수를 빠르게 끌어 올렸다.

“북, 대청해전 패전 후 강경노선 급선회”, 「조선일보」, 2010년 4월 24일 A5면.

3) 북한에 의하면 ‘2012년 강성대국 실현’이란 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의 달성으로 실현된다는 것이다.

서 보듯이 이후부터는 강경노선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북한은 전략적으로 이명박 정부를 ‘敵’으로 규정하는 대남적화전략의 기초를 견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우리나라는 6.25전쟁이라는 국란을 경험한 역사적 사실과 휴전 이후 수많은 북한의 대남도발이 간단없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최근의 주요한 대남군사도발사건은 제1, 2, 3차 서해에서의 총격사건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사건이다. 그리고 새로운 유형의 도발로서는 2009년 9월 6일 새벽에 발생한 水攻이 있었다. 이처럼 북한의 대남도발과 적화통일전략은 어느 하나 변함이 없는 상황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점차 그 정도가 전쟁에 준할 정도로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과 핵실험 등 핵개발 전략을 지속시키고 있다.

월터 L. 샤프(Walter L. Sharp) 주한 미군 사령관 은 2010년 10월 28일 “한국과 미군의 동맹군이 여전히 북한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 핵실험, 천안함 폭침 등을 자행한 것을 고려한다면 한미 양국의 군대가 북한의 또 다른 도발가능성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⁴⁾고 강조한 바 있다. 요컨대, 우리는 김정은 등장 이후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민간거주지역 포격사건으로 이어진 북한의 도발행위가 다음에는 어디로 향할지 주시하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⁵⁾

따라서 본 논문은 그동안 북한이 대남전략·전술과 관련하여 자행된 대남도발(테러) 행위, 특히 주요한 군사도발을 남한의 60년대 이후 정권별로 사례별 분석을 통하여 그 특징을 분석해 보고, 이와 더불어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은 어떠한 양상을 보였는지를 상호 비교해 보고자 한다. 또, 본 연구는 앞으로 북한의 도발행위의 예방과 대처방안을 모색해 보려는데 목적을 둔다. 대표적인 주요한 사례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함으로써 북한의 대남도발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4) “한·미·북 남침은 변할 수 없는 사실”, 「조선일보」, 2010년 10월 28일 A2면.

5)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우리가 안보의식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막고, 남남갈등을 통해서 무언가 얻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릴 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연합뉴스」, 2011년 2월 18일.

Ⅱ. 북한의 대남전략과 도발양상의 변화

1. 북한의 대남전략과 도발양상 개관

지금까지 북한이 자행해 온 수 많은 대남도발⁶⁾은 북한정권의 체제적 특성에서 나오는 ①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적 차원, ② 한국의 위기관리 능력점검, ③ 테러리즘과 국가심리전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김강령, 1998, 100). 요컨대, 金江寧(1998)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선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적 차원에서 볼 때, 작전적 차원에서의 대남도발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게 임기응변적으로 이루어지는 대남전술(tactics)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대남전술은 결국 북한의 변함없는 대남전략에 종속되는 하위개념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관성을 가지면서 상호작용을 지속하게 되는 것이다. 북한은 분단 이후 현재까지 그들의 대남전략에 따라 대남공작과 대남도발을 끊임없이 추진해 왔다. 그리고 북한이 불시의 무력도발을 주기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은 한국군 전투부대의 경계태세 파악 외에도 고위 군사정책결정과정의 민첩성과 합리성 그리고 대응방책 등을 포함한 위기관리 능력을 점검해 보는 기회로 이용하고 있다.

다른 한편 북한의 도발은 테러리즘과 대남 국가심리적 차원의 전술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북한은 폭력투쟁을 중지하거나 포기하면 북한 내에서 대남적대의식의 약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혁명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대처하는데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끊임없는 대남공작활동과 대남도발의 수위를 높여가는 것 같다. 북한의 대남공작은 한국과 주변국들의 정세에 따라 그 수위와 방법 등을 조절하며 치밀하게 진행되어 왔다. 1.21청와대 습격사태(1968.1.21), 육영수 영부인 피살사건(1974.8.15), KAL기 폭파사건(1987.11.29), 최근의 서해안의 3차에 걸친 해전(3차

6) 2003년 미국의회조사국에서 간행된 「북한 도발연표」에서는 도발을 ‘무력침공, 휴전선 위반사항, 간첩 및 무장간첩의 침투, hi-jack, 유괴납치, 테러(암살 및 폭파), 정치인, 언론 및 공공기관에 대한 협박 및 한국정부 전복을 위한 일체의 자극행위 등을 포함한다’¹⁾고 하였다. 도발은 통상적으로 軍事挑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바, 美 의회조사국이 제시한 북한의 도발의 유형들을 보면, ① 남한 육·해·공상에서의 무력침공(예: NLL 침범행위 등), ② 군 병력에 의한 휴전선 위반사항(예: DMZ내 교전), ③ 무장간첩¹⁾의 침투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은 직접적인 대남도발행위와는 달리 1990년도 이후 부터는 군사력을 활용한 간접적인 위협적 시위성 도발행위도 비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요컨대, ① 핵과 미사일 등의 군사 수단 실험 및 발사, ② 군사력에 의해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조성하는 일체의 행위 등이 있다.

대청해전: 2009.11.10), 그리고 천안함 침몰사건(2010.3.26)과 연평도 포격사건(2010.11.23) 등 내국인들뿐만 아니라 세계인들 까지도 큰 충격의 파장을 전했던 각종 테러 사건들도 북한의 대남공작 기구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들이다.

북한은 휴전 이후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의 암살을 기도하는 가하면 무장공비 침투, 항공기 테러 등 2,800여회에 이르는 각종 대남 무력도발을 자행하였고, 42만 여건에 달하는 정전협정 위반행위를 일삼았다. 북한은 대남 적화전략의 불변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술은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변화시켜 왔다. 그에 대한 개략적인 역사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⁷⁾

첫째, 해방 이후 6·25전쟁 기간까지는 ‘무력남침 전술’ 시기이다. 북한은 해방 이후 구소련 스탈린의 지원 아래 한반도 적화통일을 위해 월등한 군사력으로 6·25전쟁을 일으켰다.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며 혈전을 벌이던 중 인천상륙작전으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였지만 중공군의 개입으로 일진일퇴를 거듭하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둘째는 ‘폭력혁명 전술’ 시기(1953.8~1970.12)이다. 이 전술은 경제적·군사적으로 북한이 우위에 있을 때 사용했던 전술이다. 당시 북한은 남한에 비해 경제적·군사적 상황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병력 10만 명 감축(‘56.10)’과 ‘남북연방제(‘60.8)’를 제의하는 등 우리의 대북 경계심을 이완시키면서 내부적으로는 4대 군사노선(‘62.12)과 3대 혁명역량 강화(‘64.2)를 채택하여 본격적인 폭력혁명전술을 전개하였다. 1968년 무장공비 31명을 침투시켜 청와대를 습격하려 했던 1·21사태와 같은 해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 120명을 침투시킨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사건 등을 통해 폭력혁명을 통한 ‘한반도 공산화’라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다.

셋째는 ‘화·전양면 전술’ (1971.1~1993.2)이다. ‘화전양면 전술’이란 ‘상황이 불리할 때는 대화를 제의하고 혁명조건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무력으로 공격하는 전술’이다. 북한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한편으로는 기습남침용 땅굴을 굴착하였고, ‘조국통일 5대 강령’을 제시했던 다음해인 1974년에는

7) “6.25전쟁과 북한의 대남도발 사례,” <http://cafe.daum.net/skorva/6xpv/665>(검색일: 2010.05.10). 통일원(1995)에서는 북한의 대남전략 전개 과정을 크게 ① 무력통일추구기(1948-1953), ② 선전선 후 통일기(1953-1960), ③ 폭력혁명 통일추구기(1961-1969), ④ 대화와 대결 병행추구기(1970-1979), ⑤ 대화공세 추구기(1980-1989), ⑥ 방어적 대남전략 추구기(1990-)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8·15 광복기념식장에서 육영수 여사를 저격하였다. 또한 남북한 군대를 10만 명 이하로 감축하자고 제의했던 1976년에는 8·18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을 일으켰고, 1983년 9월 연방국가의 ‘최고연방회의’와 ‘연방상설위원회’에 남북공동의장 및 공동위원장 선출을 제의한 후 10월에는 미얀마 아웅산 묘소에서 폭탄테러를 자행하였다.

넷째는 벼랑 끝 전술 등을 통한 ‘체제생존 전술’ (1993. 3~현재까지)이다. 북한은 남한을 고립시키기 위해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시도하는 이른바 ‘통미봉남 전술’을 수시로 전개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9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사정 악화로 아사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체제 안정과 주민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남북교류를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북한은 1996년 9월 18일에 강릉 안인진리 앞 바다에 무장공비를 침투시켰으며, 1999년 6월 15일 제1연평해전, 2000년 6.15공동선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을 일으킨 데 이어 2008년 7월 11일에는 금강산 관광객 총격 사망사건, 2007년 10.4남북공동선언에도 불구하고 2009년 11월 10일에는 제3차 대청해전을 저질렀다. 이렇듯 북한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태도가 돌변하는 것은 최고위급간의 남·북간의 공동선언조차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종이선언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와 남한의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미사일·핵 등 비대칭 전력을 기초로 벼랑 끝 전술’을 수시로 구사해 오고 있다. 김정일은 2006년 7월 5일 미사일 발사 후 10월 9일에 1차 핵실험을 하였고, 2009년 4월 5일 대포동 2호 발사 후 5월 25일에는 2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특히 핵문제가 국제사회의 이슈가 된 이후에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협의체인 6자회담을 거부하고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통해 북한에 대한 지원을 얻고자 해 왔다. 그러나 2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력해지자 북한도 다른 길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2009년 8월 미국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에 이은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의 방북을 계기로 갑자기 대화 분위기로 전환하는 듯한 모양새를 갖추기도 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60여 년 동안 우리 정부의 대북관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시각각 다양한 형태로 대남도발을 자행하여 왔다. 따라서 북한군이 대남 적화 노선을 포기하고 가시적인 군사 조치를 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 남한의 대북정책과 북한의 대남무력도발사례

북한이 자행하는 도발적 테러리즘은 해방이후 지속적으로 자행해 왔다. 그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김태준, 2006, 274-275) 첫째,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테러리즘이다. 북한은 국가최고지휘자의 지휘아래 전문적으로 훈련된 특수공작요원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둘째, 직접적인 테러리즘의 대상은 남한에 한정되고 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지원저지 및 미군철수를 목표로 한다. 셋째, 국제 혁명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폭력수출이다. 넷째, 북한은 내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부에 대한 적대감이나 긴장을 조성시킨다. 다섯째, 북한은 대남테러를 통하여 한국사회의 분열 책동은 물론 궁극적인 대남적화통일을 획책하고 있다. 요컨대, 북한의 이러한 도발 목적은 1960년대부터 한국에서 불기 시작한 경제개발계획과 자주국방, 그리고 한·미연합방위체제에 대한 돌파구 마련책으로 육·해상을 통한 무장공비 침투, 국가원수 암살 및 민간인 납치, 항공기 납치 및 폭파사건, 주요시설 파괴 등을 통해 한국에서의 위기상황과 주한미군 철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획책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무력도발의 주요사례들을 남한의 개괄적인 대북정책과 연계하면서 박정희 정권이후부터 시대별로 요약하고자 한다.

1) 박정희 정권시기(1961-1979)

(1) 남한의 대북정책: 분단의 고착화 정책

‘반공을 국시(國是)’의 으뜸으로 내세운 박정희 정권은 처음부터 ‘선 건설, 후 통일’을 강조하다가 1969년에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면서 ‘주한 미군 감축’이 현실로 다가오자 자주국방 정책을 발표한 뒤 대북한 교섭을 추진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1970년 8월 15일 “남북이 분단 현실을 서로 인정하고 평화정착, 평화공존을 지향”면서 북한을 협상 대상으로 하겠다는 요지의 ‘8·15 선언’을 발표한다. 그러고 나서 한 해 뒤인 1971년에 남북 적십자 회담을 제안하자 북한이 받아들임으로써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남한과 북한의 민간기구 대표들이 판문점에서 만나게 되었다. 1972년에는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이 비밀리에 북한을 방문해서 김일성 주석을 만나 협의한 결과로, 7월 4일 ‘자주 통일, 평화 통일, 민족적 대단결’을 3대 원칙으로 한 ‘남

북 공동성명' 을 발표하였다⁸⁾. 그러나 뒤이어 박정희 정권이, 통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유신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그의 통일에 대한 기본 태도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이것은 1973년 두 개의 한국정책을 내세운 6.23선언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이 선언의 핵심내용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도적 조치로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결국 이 선언을 계기로 거의 20여 년 만에 남북한 당국이 직접 협상하여 마련한 공동성명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말았다. 그 결과 남북한 양측은 서로를 더욱 불신하였고, 각각 유신체제(남한)와 유일지도체제(북한)를 내용으로 하는 체제강화에 몰두 하는 지리한 공방이 계속되게 되었다.

(2) 북한의 대남전략과 도발사례

김일성은 4.19를 남한 적화의 결정적 계기로 이용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한국에 지하당을 조직하여야 한다는 지시를 내림에 따라 이 기간에 「인민혁명당」, 「통일혁명당」과 같은 공작 등이 시작되었다. 특히 북한은 한·일국교정상화를 위한 한일회담이 진행되자 이를 저지하려고 6·3데모를 조종하는 등 학생층에 깊숙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공작 대상은 각각 달랐으나 주로 학계, 정계, 군부 등 지식층과 노동자, 농민 등 무산층을 주 대상으로 하였으며, 공작원은 在北 남한 출신자들을 대량 선 발하여 고도의 훈련과 교육을 실시해서 간첩으로 양성, 남파함으로써 이른바 간첩의 '인해전술' 을 시도했다(문교부, 1980, 75). 특히 5.16군사쿠데타를 계기로 남한의 반공태세가 강화되자 이에 맞서 4대군사노선(1962.12)을 서둘러 추구하였고 그 결과 강화된 군사력을 배경으로 66년부터는 적극적인 대남폭력공작으로 전술방향을 바꾸었다(장수련, 2000, 53). 북한이 자행한 60년대와 70년대의 도발양상을 보면 다음과 같은 주요사건들이 있다.

8) 이를 계기로 그 동안 “북괴”로 부르면서 ‘괴뢰도당’으로 몰아왔던 북한을 사실상 하나의 정권으로 인정하고 남북대화와 협상의 대상으로 받아들인 것은 국민에게 충격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1972년 10월 17일에 박 대통령이 ‘유신’을 선포한 뒤 남한사회의 재야운동 세력에서는 “박정희가 영구집권을 위해 통일문제를 이용한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① 60년대 주요 대남도발사건

60年代 初期에는 주로 간첩사건과 군사시설 및 장비에 대한 습격사건들이 있었다. 예컨대, 1961년 4월 7일에 동해안 대진리 앞바다에 북한 해군 2천톤급 구축함 2척의 호위를 받으면서 어뢰정 6척이 남하하여 40분간 교전한 사건이 있었다(어선 6척을 나포한 사건). 이어서 1961년 8월 25일에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들어와 유엔군 측 대원을 사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민정경찰 초소를 습격사건). 이때부터 북한군은 도발이 간접적인 양상에서 직접 군사분계선을 넘어 들어오는 양상으로 바뀌었다. 1962년 12월 23일 11시경 연평도 북방 6마일 해상에서 순찰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유엔군 측 초계정이 중무장을 한 북한의 고속정 2척의 습격을 받아 약40분간 집중 포화의 세례를 받았다. 유엔군 측은 3명이 전사하고 3명이 부상을 당하였다(연평도 순찰선 습격사건). 1964년 1월 14일 한국공군 소속 F86D 전투기 한 대가 비무장지대 근방을 순찰 비행 중에 북한의 대공 포화를 맞고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전투기 습격사건). 1962년 1월부터 1964년 8월까지 북한간첩 김영춘에게 포섭된 都禮鍾 등 500여명의 불순분자들이 소위 ‘인민혁명당’ 이라는 지하조직을 서울에 구축하고 한·일회담의 저지, 북한의 통일노선지지, 사회혼란 획책 등 본격적인 지하공작으로 제2의 4·19를 기도하다 1964년 8월에 검거된바 있다(인민혁명당 사건). 또 1964년 3월경 간첩 김무송에게 포섭되어 荏子島를 거쳐 월북, 간첩교육을 받고 밀파된 김종태에 의해 자행된 「통일혁명당 간첩사건」이 있다(문교부, 1980, 75-76).

60年代 後半期에는 북한은 좀 더 과감하고 폭력적인 군사도발을 자행하였다. 1967년 1월 19일 오후 한국해군 소속 56함(당포호)이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 경비정 2척의 집중 포화를 받고 격침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40여명의 사상자와 30여명의 실종자가 발생하였다. 1968년 1월 21일 21시 북한 「민족보위성」 소속 정찰국 산하 124군 부대소속 무장 공비 특공대 31명이 비무장지대 철책선을 절단하고 은밀히 침투하여 청와대 폭파와 요인 암살을 목표로 청와대 인근인 서대문구 평창동까지 진출하였다가 경찰 검문에 발각되어 약 3시간의 교전 끝에 1명을 생포하고 나머지 잔당이 모두 사살되는 사건이 일어났다(1·21청와대기습 미수사건). 이 사건은 한국정권의 핵심부를 직접 겨냥했다는 대담성외에도 북한 특공대의 침투능력을 과시했다는 측면이 있다. 1968년 10월 20일 2척의 북한 공작선으로 경북 울진군 북면 고포 앞 해안에 북한 무장간첩 15명이 1개조가 되어 산악지대 소부락을 무력으로 점거하고 본격적인

무장 게릴라 근거지 구축을 기도하였다. 1968년 11월 2일 22시 40분경에 같은 장소로 고무보트 4척으로 운송, 상륙한 무장공비 30명이 11월 3일 강원도 삼척군 원덕면 송황리에 침입하여 주민 8명을 감금, 불온뼈라, 서적 등을 배부하고 노동당 가입을 강요한 후 도주하였다. 북한은 이렇게 10월 30일부터 11월 3일 사이에 산발적으로 이 지역에 무장공비 120명을 침투시켜 양민을 돌과 대검으로 난폭하게 살해하는 등 사회 혼란과 공포 분위기 조성을 위한 극악무도한 살인행위를 자행하였다(울진·삼척 무장공비침투사건). 이러한 북한의 도발목적은 소수부락을 점령하여 군사정보망을 구축하고, 정보가치가 있는 인사의 대동월북, 군사, 경제, 사회분야의 정보수집 등을 목표로 한 『게릴라 활동』이라는 데 특징을 지닌 것이다.

1968년 1월 23일 오후 1시 45분 동해의 공해상에서 4척의 북한 초계정과 미그기 2대의 위협아래 미 해군 정보수집 보조함 푸에블로호가 원산항으로 납치되었다(미 해군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1969년 4월 15일 오후 1시42분 청진 동남방 90마일 동해의 공해상공에서 정상적인 정찰업무 비행을 수행하던 중 미군기 EC121기가 전투기의 기습을 받고 추락하여 29명의 승무원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EC121기 피격사건). 이것은 도발의 상대가 남한뿐만 아니라 미국 해군이라는데 특징이 있다. 결국 이 당시의 북한의 무력도발은 육상, 해상, 공중 등 입체적인 방법으로 한국군, 민간인, 미군 등 무차별적 도발을 자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KAL여객기 납치사건(1969.12.11)⁹⁾ 등 도발의 행태는 공간과 시간을 불문하고 도발적 테러행위가 자행되었다.

② 70년대 주요 대남도발사건

70年代에 이르러서 대남도발의 양상은 새로운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특징적인 것은 표면적으로는 남북대화를 진행시키면서 이면에서는 「남침용 땅굴」을 파는 『화·전 양면전술』을 구사한 것이다. 즉 1971년 9월 20일 남북적십자 제1차 회담이 열리고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 발표, 1974년 3월 20일 대미 평화협정제의 등과 같은 데탕트 분위기와는 별도로 고랑포 제1땅굴(1974.11.15), 철원 북방 제2땅굴(1975.3.19), 판문점 제3땅굴(1978.10.17)이 잇따라 발견됨으로써 북한의 2중적인

9) KAL YS-II기 납북: 북한간첩 조창희가 강릉발 서울행 KAL여객기를 납북, 70년 2월 14일 탑승자 51명 중 39명 송환, 승무원 등 12명 미송환 사건.

대남전술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박헌욱, 1998, 287).

특히 제1호 땅굴은 군사분계선을 무려 1Km나 파 들어온 것으로서 시간당 1개 연대병력이 침투할 수 있는 수준이며, 2, 3호 땅굴은 높이와 폭이 각각 2미터인 대형 터널로서 시간당 3만 명의 병력과 야포까지 침투 가능한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전면 남침 감행 시 아군의 초기 저항을 받지 않는 가운데 전투요원의 대량 침투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이 당시의 또 다른 대형 도발사건은 한국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살해하려는 사건이었다.

1968년 1.21사건으로 대통령의 살해에 성공을 거두지 못한 북한은 1974년 8월 15일, 북한 공작원이 공작선 '만경봉' 호로 일본에 침투하여 문세광을 포섭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하게 한 간접적인 도발행위는 대한민국에 지대한 위해를 끼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남한 박정희 대통령의 부인이 그의 시해기도 과정에서 살해되었다는 것이다. 관광객으로 가장하여 서울로 들어온 재일친북단체의 간첩이 공식 행사장에서 박 대통령을 향하여 권총을 몇 발 발사하였으나 박 대통령은 무사히 피하였지만, 영부인은 유탄에 맞아 수 시간 후 사망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간첩 문세광은 재판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처형되었다.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일어난 도발이라는 점과 유엔군의 성격을 띤 미군 장교가 도끼에 맞아 희생되었다는 점에서 북한의 호전성과 무 차별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은 판문점 비무장지대 중립 지역에서 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하고 있던 미군과 한국군을 일단의 북한 병사들이 도끼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공격하여 2명의 미국 육군 장교를 살해하고, 4명의 미군 사병 그리고 5명의 한국군 병사에게 부상을 입혔다. 북한은 유엔 사령관 리처드 G. 스틸웰 장군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 사건을 "유감스런" 일이라고 말하였을 뿐, 미국 정부가 장교들의 "사악하고 도발되지 않은 살인"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북한은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70년대에는 파주금촌지역 간첩침투사건(1970.4.8), 국립묘지 현충문 폭파사건(북한 간첩 2명이 6.25기념식에 참가할 정부요인을 암살할 목적으로 현충문에 폭탄을 장치하던 중 조작 실수로 폭발, 건물 일부 파손, 1명 폭사, 1명 도주한 사건: 1970.6.22), 소흑산도 간첩선 격침사건(1971.6.1), 김포침투 무장간첩사건(1971.9.17), 제주우도무장간첩사건(68년 와해된 통일혁명단 재건 기도: 1973.3.4), 무장간첩 휴전선 침투(남한 국민을 상대로 민심 교란: 1973.4.17), 고려대 노동문제

연구소 김낙중 매수사건(대학가 및 노동계 포섭 목적: 1973.5.24), 20사단지역 간첩 침투사건(1977.5.3), 동해안 무장간첩선 격침사건(1978.5.19) 등 『화·전 양면전술』 차원의 대남도발이 잇따랐다.

2) 전두환·노태우 정권시기(1980-1992)

(1) 남한의 대북정책: 과도기적 반공정책

전두환 정권은 1982년 1월에 ‘민주화합 민주통일 방안’ 을 발표하는데, 당시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강력한 반공정책을 펴던 때라서 그쪽 ‘눈치 살피기’ 에 여념이 없었다. 또한 사회통제를 위해선 반공정책을 토대로 공안정국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북한과 친하게 지내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었다. 한편 아웅산 테러 사건이나 소련 전투기의 KAL 격추 사건, 정권 말의 하치야 마유미 사건 등으로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도 안 좋았고, 정권 유지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조장한 면도 많았기 때문에, 몇 차례 북한과의 접촉은 있었지만 진전된 건 없었다. 하지만 1985년 9월에 남북 이산가족 고향방문단과 예술 공연단 교환을 성사시켜 남북 교류사상 가장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그때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이산가족의 만남은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시청자들까지를 눈물바다에 빠뜨렸다.

노태우 정권은 88년에 “남북이 모든 부문에서 교류를 추진하면서 공동 번영을 추구한다” 는 ‘7·7 선언’ 을 발표한다. 그리고 ‘88 서울 올림픽’ 의 성공에 고무되어 1989년 9월 11일 ‘과도적 통일체제로 남북연합을 구성하자’ 는 ‘한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을 제시한다. 노 정권 시절에 특기할만한 일은 1991년 9월 18일 제46차 유엔 총회에서 남한과 북한이 각기 별개 의석을 가진 회원국으로 유엔에 가입한 것이었다. 분단 46년 만에 남과 북이 독립된 국가의 자격으로 유엔 회원국이 된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때까지 남한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 라고 주장하면서 단독 가입을 추진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을 보고 의아해 하면서도 통일을 향해 큰 진전을 이룬 ‘업적’ 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남북한의 유엔 공동 가입 석 달 뒤인 12월 13일 서울에서 열린 고위급회담에서는 ‘남북 사이의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약칭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어 조인된다. 이것 역시 당시 남북 관계의 중요한 진전이었다. 하지만 노태우 정권도 어차피 전두환 정권의 연장선상에 있었기 때문

에 역시 공안정국의 틀은 벗어나지 못했다.

(2) 북한의 대남전략과 도발사례

북한은 1979년 10.26사건 이후 남한에서 새로운 군부세력이 등장하자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실무대표접촉(1980.2~8)을 통해 한국의 정세를 관망하면서 혁명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으나 1980년에 접어들면서 소위 민주화운동이 거세지고 정국불안이 가중되자 무장도발을 통해 남한 내 혁명으로 유도하는데 주안점을 둔 대남공작을 폈다. 이와 함께 1980년 10월 제6차 노동당대회에서 기존의 연방제 통일방안보다 구체화시킨 ‘고려민주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하는 등 연방제 통일공세를 강화하였다. 남한의 국내정세는 1980년 5.18광주사건으로 전두환 정권의 권위에 문제가 일면서 동시에 운동권 학생들에 의한 대학소요가 폭력화, 극좌화 되어갔고, 노사분규가 단순한 임금투쟁의 선을 넘어 반체제적 정치투쟁화·계급투쟁화 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나타난 여·야간의 갈등과 1988년 4월 26일자 총선을 계기로 대두된 여소야대 현상으로 인한 정국의 혼란이 심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을 남조선혁명전술 운용상의 고양된 昂揚期 戰術段階로 판단하여 이 호기를 놓치지 않고 滿潮期 戰術段階로 끌어올려 결정적 시기를 포착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었다(장수련, 2000, 57).

이 시기에 북한은 남한사회가 급속도로 안정을 찾아가는 것을 막고 사회혼란을 지속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무장공비와 간첩들을 남파하였다. 더욱이 한국의 대통령을 살해하려고 하는 모험도 계속되어지면서 노골적인 직접적인 테러행위가 자행되었다. 특히 전두환 정권 당시는 무차별적인 테러를 감행하였다. “아웅산 묘소 폭탄테러사건”, “부산 다대포 무장간첩침투 사건”을 비롯해서 “김포공항 폭탄테러”, “KAL기 폭파” 등 많은 인명을 살상하는 대남폭력도발을 자행하였다. 1980년대 북한의 대남테러는 근본적인 목적에서는 1970년대와 동일하지만 80년대 후반에는 한국에서 개최되는 86아시아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방해하려는 책동이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행사의 남한에서의 개최는 북한에게는 패배감을 가지게 하였고, 남한이 국제사회에서의 정치·경제적, 외교적인 지위를 확보함에 따라서 북한에게 상대적인 소외감을 가지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이것을 탈피하고자 끊임없는 도발적 테러를 자행해 왔다.

① 미얀마 아웅산 묘소 폭파사건

1983년 10월 9일 한국의 전두환 대통령이 버마(미얀마) 랑군의 순교자 묘역에 현화하기 위하여 도착하기 수 분 전에 강력한 폭탄이 폭발하여, 대통령의 아시아 6개국 순방의 첫 기착지인 미얀마에서 전 대통령을 수행하던 17명의 고위 한국 관리가 사망¹⁰⁾하고 다른 14명의 관리가 부상당하였다. 전 대통령은 이 살해 사건을 "전쟁 선포와 다름없는 중대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이러한 도발 행위가 재발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보복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북에 경고하였다. 북한의 김일성은 전 대통령의 발언을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북한 육군 진모 소령과 대위 강민철 등 2명의 테러용의자가 체포되어 랑군 지방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대위 강민철은 폭파 범행을 자백하고, 북한에서의 훈련 그리고 북한 화물선을 타고 미얀마로 잠입한 과정을 상세히 진술하였다. 그는 또한 암살 팀이 버마에 도착한 후 북한 대사관 참사관의 집에서 머물렀다는 사실도 밝혔다. 11월 4일 버마는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였다. 1984년 2월, 버마 대법원은 하급 법원에서 내린 사형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건은 한국 고위관리의 희생뿐만 아니라 제3국에서까지 민족적 수치를 드러낸 북한의 만행적 도발이라는데 특징이 있고, 다대포로 침투(1983.12.3)한 간첩들에 의해서 밝혀진 바와 같이 북한의 대남공작 능력은 인민무력부 소속의 항공, 해상, 육전여단 및 저격여단 등 9만9천 명, 노동당 연락부 소속 공작원 1천 명, 그리고 조총련 공작원 4백 명 등 10만 명의 특공대가 테러공작 및 비정규 특수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은 대남공작과 도발은 바로 전면전으로 이어 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주는 것이라 하겠다(박헌옥, 1998, 288).

10) 사망자 중에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또 한 사람의 고위 대통령 보좌관,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외무장관을 포함한 3명의 장관, 3명의 차관, 버마 주재 한국 대사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이 폭발 사고로 미얀마인 4명이 사망하고 32명이 부상당하였다.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본 남한의 대북정책과 북한의 도발양상의 변화

〈표 1〉 전두환·노태우 정권시기의 주요대남도발사건

도발일자	도 발 내 용	결 과
80.3.23	* 한강 하구에 3인조 공비 수중침투	전원 사살
80.11.3	* 전남 횡간도에 무장간첩 침투	3명 사살
81.3.27	* 강원도 금화에 3인조 무장간첩 침투	1명 사살
81.6.21	* 충남 서산에서 무장간첩선 격침	9명 사살, 1명 생포
81.8.26	* 미 정찰기 「SR-71」기 미사일 공격	
82.5.15	* 동해안에 무장공비 2인조 출몰	1명 사살
82.8	* 전두환 대통령 가봉방문시 대외정보조사부 요원을 동원, 살해 기도	추진중단
83.6.19	* 임진강에 3인조 무장공비 침투	전원 사살
83.8.5	* 경북 경주 앞바다에 출몰한 간첩선 격침	4명 사살
83.10.9	* 북한공작원 3명이 전두환 대통령 암살 목적으로 한 버마 아웅산 묘소폭탄테러사건	수행원 17명 사망
83.12.3	* 부산 다대포에서 남파간첩선 격침	1명 사살 2명 생포
84.9.24	* 북한무장간첩 1명, 대구에서 민간인 살상	2명 사망, 1명 부상
84.11.23	* 판문점 총격사건	북경비병 3명, UN경비병 1명 사망
85.10.20	* 부산 청사포 앞바다에서 간첩선 격침	5명 사살
86.9.14	* 김포공항 폭탄테러(1층 대합실 외벽 쓰레기통에서 종류미상의 폭발물 폭발)	5명 사망, 32명 중경상 (범인 못 잡음)
87.11.29	* '88올림픽방해목적 KAL기 폭파: 노동당 조사부 공작원 김현희, 김승일이 기내에 시한폭탄을 설치, 버마해역 상공에서 공중폭파	탑승객 115명 전원 사망
88.1.20	* 美,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	
90.2	* 강화도 하일리에 고정간첩 김낙중 1차 침투	6명
90.3.7	* 제4땅굴 발견(양구 동북방 26Km지점)	비무장지대 지하 145m, 폭2m, 전체길이 2,052m, 군사분계선에서 1,502m남 쪽에서 발견
90.10	* 강화도 하일리에 고정간첩 김낙중 2차 침투	6명
91.10	* 강화도 하일리에 고정간첩 김낙중 3차 침투	6명
92.2.10	* 서부전선 백학산 동북방 2.5Km에 공비 3명 침투	
92.4.14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공비 3명 침투	
92.5.22	* 철원 남방 800m에 무장공비침투	3명 사살
92.11.3	* 서부전선 전방 700m에 공비 3명 침투	

출처: “북한의 대남도발과 테러일지”, <http://blog.naver.com/michelin09/19955150>

② 대한항공 858기 공중폭파 테러

1987년 11월 28일 밤 이라크의 바그다드를 출발한 대한항공 858 여객기가 아랍에미레이트의 수도 아부다비에 기착한 뒤 방콕으로 향할하는 도중, 북한공작원 김현희가 사전 장치한 폭탄에 의해 공중 폭파된 사건으로써, 이 여객기는 11월 29일 14시 01분 미얀마의 뱅골만 상공에서 방콕공항에 “45분후 방콕에 도착하겠다. 비행중 이상 없다” 는 교신을 보낸 것을 끝으로 소식이 끊어졌다. 이 여객기는 중동에서 귀국하던 한국인 근로자 등 승객 93명과 외국인 2명, 승무원 20명 등 모두 115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 여객기 잔해가 태국 해안에서 발견되었다고 태국 내무부가 발표하였고, 30일 오후 대한항공 858기의 추락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사고 직후 12월 1일 사고 비행기에 한국 입국이 금지된 “요주의 인물” 인 일본인 2명이 탑승했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수사는 급진전 되었다. 수사 결과 문제의 두 일본인은 “하치야 신이치”와 “하치야 마유미” 라는 여권을 가진 남녀로 바그다드에서 탑승한 뒤 아부다비 공항에서 내렸으며, 이중 마유미의 여권은 위조여권임이 바레인 공항에서 밝혀졌다. 이들은 바레인에서 요르단으로 탈출하려다 위조여권 적발로 체포되자 담배 속에 숨겨둔 독극물을 삼켜 남자는 숨지고 여자는 중태에 빠졌다. 한국으로 넘겨진 “마유미” 는 본명이 “김현희” 이며 당 대외정보조사부 소속 공작원으로 음독자살한 “김승일” 과 함께 “88서울올림픽 개최방해를 위해 KAL기를 폭파하라” 는 북한 김정일의 친필 공작명령을 받고 기내 좌석 선반에 라디오와 술병으로 위장한 폭발물을 올려 놓고 중간기착지인 바레인에서 내린 다음 공중에서 폭발하도록 하였으나 실패했다고 실토했다(김용호, 2007, 65). 이러한 사건은 고도의 국가 심리전 차원에서 자행된 의도적 도발행위라고 할 수 있다.

3) 김영삼 정권시기(1993-1997)

(1) 남한의 대북정책: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대북강경정책견지

1993년 2월에 들어선 김영삼 정권은 ‘화해 협력에서 남북연합으로, 그리고 통일국가 완성’ 이라는 3단계 통일방안을 발표한다. 그러나 그해 3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하자 남북 교류가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 1994년에는 남북 정상회담을 위

한 예비접촉을 벌였으나 김일성의 사망(1994.7.8)으로 회담이 무산되었다. 김영삼 정권의 ‘문민정부’는 대북정책을 스무 번도 넘게 고치면서 우왕좌왕 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시기는 필자의 견해에서 보면, 한국의 국내 정치 환경이 과거 군부 정권기에서 민주화 정권으로 이행되어가는 과도기적인 단계로 볼 수 있고, 김영삼 정권 이후에는 좌파적 성격이 강한, 그리고 대북정책에서 유화적인 정권이 10년간을 집권하게 되는 징검다리적 성격의 정권이라는데 의미를 둘 수 있다. 그리고 이 당시 문민정부는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하여 적극성을 보이기도 했다.

대통령 김영삼은 1993년 2월 25일 취임사와 1994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김일성 주석과 만날 용의가 있음을 밝히자 북한은 1994년 6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통하여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 간에는 제5공화국 때 최초로 제안하였고, 제6공화국 때에도 정상회담을 시도하였지만 성사시키지 못한 정상회담 개최를 부총리급 예비접촉을 판문점에서 열고, 남북분단이래 최초로 1994년 7월 25일부터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양수뇌가 만나기로 합의한 바 있었다. 이것은 과거 남한정부는 군부정권이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김영삼 정권은 민간정부라는 점이 심리적으로 부담이 적지 않았겠냐는 추측이 있다.

(2) 북한의 대남전략과 도발사례

① 서울 불바다론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 3월 19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특사 교환을 위한 8차 실무 접촉 때 북측 박영수 단장은 “전쟁이 나면 서울은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¹¹⁾ 그러자 정부는 이 발언을 역이용하여 국민의 대북인식을 새롭게 하는데 활용하였다. 반북 여론조성에 활용키 위해 비공개 회담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녹화 테이프를 공개했고, 방송은 이 발언을 연일 내보냈다. 국민의 대북 적대감은 한층 높아졌고, 남북 간 긴장도 역시 심각하게 고조되었다. 이런 대결상황은 다음해 “북한을 주적(主

11) 최근 북한의 협박성 성명·보도를 보면, 1994년 3월 19일 북한의 박영수의 “전쟁이 나면 서울은 불바다 된다”라는 강변 이후, “우리식 선제 타격이 개시되면 모든 것이 잿더미 될 것이다”(조선중앙통신, '08.3),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면 충돌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은 다시 제3의 서해교전, 제2의 6.25전쟁으로 번지게 될 것이다”(조선중앙통신 군사논평원, '08.5.8), “북남사이의 정치 군사와 관련한 모든 합의 사항의 무효화, 서해 해상경계선에 관한 조항을 파기한다”(조평통, '09.1.3) 등 끊임없는 공갈성 협박을 일삼고 있다.

敵)으로 상징하면서...” 라는 전례 없는 표현이 담긴 국방백서 발간으로 나타났다¹²⁾.

② 강릉 잠수함무장공비 침투사건

1996년 9월 18일 고장 난 북한 잠수정(RPG-7 대전차 로켓포 외 21종의 무기로 무장한)이 강릉시 근해에서 좌초된 것이 발견되었다. 26명의 북한 공작원들이 간첩/정찰 임무를 띠고 있던 잠수정에서 동해안으로 상륙하였다. 남한 당국에 따르면, 이중 11명은 잠수정에 있던 북한 특공 요원에 의하여 사살되었으며, 13명은 투항을 거부하고 남한 군과의 교전에서 사살되었고, 1명은 생포되고 나머지 1명은 도주하였다. 남한 군이 침투 간첩을 뒤쫓는 과정에서, 11명의 한국군과 민간인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 사건은 무력 침투가 점차 대담해 지고 있음을 말해 주는 동시에 북한의 이중성을 드러낸 사건이기도 하다.

1996년 10월 1일 이 잠수정 사건에 대하여 "보복"하겠다는 북한의 위협이 있는 후 한국 외교관 최덕근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살해되었다. 처음부터 북한이 이 살해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정황 증거가 발견되었으며, 그 후 시체 부검 결과 최덕근의 체내에서 발견된 독극물이 9월 좌초된 잠수정의 북한 공작원들이 지니고 있던 독약과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12)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등장하면서 2004년 국방백서부터 이 용어의 삭제를 결정한바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시 '주적 개념'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본 남한의 대북정책과 북한의 도발양상의 변화

〈표 2〉 김영삼 정권시기의 대남도발사건

도발일자	도 발 내 용	결과
93.9.4	* 연천북방 DMZ내 공비 3명 침투	
93.10.4	* 강원도 명주군 주모진 동남방 3Km에 공비 3명 침투	
93.11.30	* 강화도 교동도 빈장포 해안에 공비 3명 침투	
94.3.6	* 장단반도 임진강에 공비 3명 침투	
94.3.19	* 서울 불바다론	
94.7.8	* 김일성의 갑작스런 사망	
95.2.20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무장병력 40명 투입사건	
95.5.30	* 「86 우성호」 서해에서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	동년 12.26 선원 5명 판문점을 통해 송환(3명은 사망)
95.7.9	* 안승운 목사 납북(중국 연길)	
95.10.17	* 임진강 자유의 다리 남방 1.5Km지점으로 무장간첩 침투	1명 사살 1명 도주
95.10.24	* 충남 부여 소재 정각사에 무장간첩 2명침투	1명 생포 1명 사살
96.4.5	* 판문점 무장병력 2개 중대 무력시위	
96.4.19	* 연평도 북한 어뢰정 2척 침범	
96.5.23	* 백령도 북한 경비정 5척 침범	
96.9.18	* 강릉 잠수함 무장공비 침투: 무장공비 26명이 승선한 인민무력부 정찰국 소속 상어급 소형잠수함(350톤)이 강릉시 안인진리 앞 해상에 침투한 사건	생포1, 사살 13, 피살 11, 도주1
96.10.1	* 블라디보스톡 주재 최덕근 영사 피살	
97.10.17	* 대성동 자유의 마을 주민 2명 납북	97.10.21 송환.
97.10.27	* 경남 울산 남파간첩 최정남, 강연정 검거	강연정 조사과정에서 음독 자살
97.2.15	* 귀순자 이한영(82년 귀순)피살	분당소재 아파트 앞 총격 받아 사망

출처: “북한의 대남도발과 테러일지”, <http://blog.naver.com/michelin09/19955150>

4) 김대중 · 노무현 정권시기(1998-2007)

(1) 남한의 대북정책

김대중 정권의 대북정책은 ‘햇볕정책’ 이라는 한 마디로 요약된다. 이 어휘는 북한의 자존심을 지나치게 자극한다는 지적을 받아 정부의 공식 용어로는 ‘대북포용정책’ 으로 명명하게 되었다. 이 정책은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지 아홉 달만인 1998년 11월에 금강산 관광이 시작됨으로써 처음으로 빛을 보았다. 그는 2000년 3월

‘한반도에서 냉전을 끝내고 평화를 정착시키며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 는 요지의 ‘베를린 선언’ 을 발표하였다.

남북 관계 개선에서 김대중 정권이 이룬 최대의 업적이 ‘6·15 남북 공동선언’ 이라는 점에는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 바 있다. 2000년 6월에 평양을 방문한 김 대통령은 김정일과의 면담에서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의 공통성 인정, 인도적 문제의 조속한 해결, 경제협력 등을 비롯한 남북 간 교류의 활성화 등’ 을 뼈대로 하는 ‘6·15 선언’ 을 발표한 바 있다. 이것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과 북의 국정 책임자가 합의해서 만든 공식 문서라는데 의미가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재임기간에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이 1998년 6월 시작한 ‘소떼 방북’ 은 같은 해 10월과 2000년 8월로 이어진다. 그리고 정치·경제·문화 분야의 남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식량을 비롯한 대북 원조도 물량이 상당히 커서 보수 세력으로 부터 ‘퍼주기’ 라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또 1999년 6월 15일 서해 연평도 부근 해상에서 일어난 제1차 ‘서해교전’ 과 2002년 6월 29일 비슷한 해역에서 터진 제2차 교전 때문에 남북 간에 긴장감이 돌았으나 무사히 위기를 넘기도 하였다.

노무현 정권은 김대중 정권의 ‘대북 포용정책’ 을 대체로 이어받는다. ‘참여정부’ 는 ‘12대 국정과제’ 의 맨 앞을 차지하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려면 공존정책을 통해 남북 간의 긴장을 누그러뜨리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포용정책이 열매를 맺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2003년 3월 6일 ‘대북 송금 의혹 특별검사 법안’ 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후에 심각한 논란을 일으킨다. 김대중 정권 시절에 통일·외교 부문의 핵심으로 일하던 사람들이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주요 대북 사업을 성사시키려고 북한 정권 고위층에게 거액의 돈을 보냈다는 혐의에 관해 조사를 해서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사법처리 하겠다는 것이 그 법안의 취지였다. 실질적으로 김대중 정권을 계승한 노 정권이 이렇게 강경한 자세를 보이자,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그리고 북한도 남북 협력과 통일사업을 위해 비밀을 지키면서 주고받은 자금을 공개하는 것은 남북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면서 참여정부에 대해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그 뒤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관계에서 냉탕과 온탕을 오락가락 하다가 2007년 10월

2일 군사분계선을 걸어 넘어가서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한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10·4 선언)이다. 선언의 8개 기본 조항은 ‘6·15 남북 공동선언 고수와 적극 구현’ 을 시작으로, ‘상호 존중과 신뢰’ ‘긴장완화와 평화보장’ ‘정전체제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 ‘경제협력 사업 확대 발전’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 발전’ ‘인도주의사업 적극 추진’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 위한 협력 강화’ 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선언의 알맹이들이 실현된다면 평화공존체제는 확고하게 굳어질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문제는 ‘10·4 선언’ 이 남쪽에서 12월 19일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승세를 굳히던 시점에 나왔다는 것이었다. 이 후보가 당선되면 그 선언을 이어받아 실천해야 할 텐데 그 점이 불분명했다.¹³⁾ 이 시기의 북한의 대남도발의 양상과 특징들은 과연 어떠한가는 관심의 대상이 된다.

(2) 북한의 대남전략과 도발사례

과거 정권의 대북 적대적 관계에서, 당시 정권의 유화적·융합적 대북정책이 북한의 도발 양상과 빈도에 변화를 가져왔는가? 지난 1996년 9월 18일 강릉 앞바다에 북한 잠수함(상어급, 350톤)이 좌초한지 2년이 채 못 되어 또다시 1998년 6월 22일 속초 앞바다에서 이번에는 잠수정(유고급, 100톤급)이 우리의 영해를 침범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¹⁴⁾ 이어 7월 12일에는 속초 앞바다 잠수정 침투사건이 일어난 지 20일 만에 인근 동해시 해안에서 북한 무장간첩의 시체와 장비가 발견됨으로써 그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 수중 추진기 등 각종 침투용 무기 및 장비들은 그 상태와 종류로 미루어 보아 속초 잠수정 사건 이후에도 공작원 침투를 지속적으로 기도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김강령, 1998, 105).

13) 2009년 봄이라는 시점에서 ‘10·4 선언’은 김대중 정권 시절의 ‘6·15 선언’과 함께 ‘용도 폐기’된 상태이다. 이 시기는 소위 기존의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지닌 정권으로 교체가 이루어졌던 시기이다. 과거 정권과는 차별화된 성격의 정책들이 집행되어 져고 대북관계도 냉각관계로 급진전한 시기이다.

14) 상어급 잠수함은 북한 해군의 300톤급 잠수함이다. 1996년 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유명하다. 천안함 사건도 상어급 잠수함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고급 잠수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군의 잠수함이다. 북한이 최초이자 유일하게 독자 개발한 잠수함이다. 1998년 동해의 속초 앞바다에서 콩치 그물에 걸려서 잡혔다. 경상남도 진해시의 제9잠수함전단 사령부에 전시되어 있다.

① 제1 연평해전

1999년 6월 6일부터 북한 측 경비정이 매일 북방한계선을 넘어와 몇 시간씩 한국 영해에 머물면서 반응을 살피고 돌아가고 있었다. 1999년 6월 15일 북한 측의 움직임이 9일째 되는 날인 오전 경비정 4척이 꽃게잡이 어선 20척과 함께 북방한계선 남쪽 2km 해역까지 내려왔다. 이에 대한민국 해군은 참수리급 고속정¹⁵⁾과 초계함 10여 척을 동원하여 오전 9시 7분과 9시 20분 두 차례에 걸쳐 선체를 충돌시키는 밀어내기식 공격을 감행하였다. 충돌공격을 받은 북한 경비정 등산곶 684호는 25mm 기관포로 공격을 가해 왔으며, 북한 어뢰정 3척도 가담하였다. 결국 등산곶 684호는 대한민국 해군의 참수리급 고속정, 포항함의 반격으로 반파되어 퇴각하였다. 이날 교전에서 참수리급 고속정 325호의 정장 안지영 대위가 부상을 입고, 우리 장병 7명이 부상당했다.

이에 반해 북한 어뢰정 등 함정2척이 침몰하고 3척이 대파되어, 최소 70여명~200여명의 사상자가 있었으리라 판단, 추측하고 있다. 북한 해군은 교전에서 생존해 돌아온 등산곶 684호의 갑판장을 새 함장으로 임명하였으며, 대한민국에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였다. 당시 교전에 참가한 대한민국 해군 제 2 함대의 사령관이던 박정성 제독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대기발령으로 보직을 옮겼으며 군수참모부장과 정보·작전참모부장을 거쳐 군수사령관(소장)으로 전역했다.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대기발령으로 보직을 옮긴 것은 당시 김대중 정부가 북한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15) 참수리급 고속정은 백구급 미사일 고속정의 제조 단가가 비싸 Low급 전력으로 개발된 대한민국 해군의 주력 고속정으로, 대위가 정장으로 지휘한다. 기본 설계는 백구급 후기형을 축소시킨 것으로 총 배수량은 170톤이다. 1978년부터 코리아 타코마와 대우조선에서 여러 모델이 건조되었다. 참수리급 고속정은 건조 과정에서 대간첩전의 교훈을 바탕으로 무장 시스템을 바꾸었는데, 이를 기준으로 초기형, 중기형, 후기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해군이 운용하고 있는 참수리급은 75척 정도이며, 대부분 노후화된 상태다. 초기형 5척은 필리핀 해군에 매각되었다. 참수리급 고속정은 2006년 현재 30년 가까이 현역으로 운용 중이나 함의 수명이 다하고 노후화되고 있어, 해군은 차기 고속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 2015년 정도까지는 참수리급을 계속 운용할 예정이다.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본 남한의 대북정책과 북한의 도발양상의 변화

〈표 3〉 김대중·노무현 정권시기의 대남도발사건

도발일자	도 발 내 용	결 과
98.6.22	* 속초근해에 북노동당 산하 잠수정 침투	승조원 및 공작원 9명 선내에서 자살
98.7.12	* 묵호 무장간첩 침투: 동해시 묵호동 해변에서 우리 주민에 의해 발견	잠수복 착용 무장간첩 시체 1구발견
98.10.20	* 강화도 해안에 노동당 작전부 반잠수정 침투	軍에 발각 도주함
98.12.18	* 전남 여수해안에 노동당 작전부 반잠수정 침투	군에 의해 격침, 시체 1구 인양
99.6.15	* 서해교전 발생(제1 연평해전)	교전발생
99.9.2	*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NLL무효화 선언	
00.6.15	* 2000년 남북 정상 회담 개최, 6·15 남북 공동선언	6.15 남북공동선언
01.11.27	* 북한군 비무장지대 아군 초소 총격사건	
02.6.29	* 제2차 연평해전	교전발생 6명 사망
03.2.20	* 북한 전투기1대 서해 연평도 인근 NLL침범	
03.2.24	* 북한 미사일 1기 동해상으로 발사	
03.3.2	* 북한 공군기 동해 공해상공에서 미군 정찰기에 접근, 위협	
03.3.10	* 동해안으로 지대공 유도탄 미사일 발사	
03.7.10	* 북한 경비정 남쪽 0.3마일 해상까지 남하, NLL넘어 북상함	
03.7.17	* 연천 DMZ서 아군 GP항해 총격	
04.1.4	* 북한 경비정 서해 NLL월선	2004년에는 북한어선(3회)을 비롯한 북한 경비정 들(5회)의 NLL침범이 빈번하게 자행되었다.
04.12.31	* 남북 군함 서해 NLL에서 1시간 대치	
06.7.6	* 대포동 1기를 포함한 미사일 7기 발사	
06.10.9	* 북한, 제1차 핵실험 강행	
07.6.7	* 미사일 2발 서해상으로 발사	
07.6.19	* 단거리 미사일 1발 동해상으로 발사	
07.10.2-4	* 노무현, 김정일 남북정상회담	10.4남북공동선언

출처: “북한의 대남도발과 테러일지”, <http://blog.naver.com/michelin09/19955150>

② 제2 연평해전¹⁶⁾

99년 6월 15일 참수리급 고속정이 부딪쳐 막는 일명 "밀어내기 작전"으로 대응한 최초의 연평해전 이후, 한·일 월드컵이 막바지에 이른 2002년 6월 29일에 연평도

16) 대한민국 국방부는 처음 서해교전(西海交戰)이라고 부르던 것을 2008년 4월에 제2연평해전(第二延坪海戰)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제2연평해전 추모식을 정부기념행사로 승격시켰으며, 주관 부서도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국가보훈처로 옮겼다.

근해 북방한계선에서 무력 충돌이 다시 일어났다. 함포와 기관포를 주고받는 치열한 격전 후 대한민국의 피해는 6명이 전사, 18명이 부상하고 참수리급 고속정 357호가 침몰하였다. 한편 북한의 피해는 약 30여명의 사상자를 내고 SO-1급 초계정 등산곶 684호가 반파된 채로 퇴각하였다. 대한민국 해군에서는 집중포격을 당한 참수리 고속정 357호 정장 윤영하 소령(당시 대위, 1계급 추서)이 그 자리에서 중상을 입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전사하고, 부정장 이희완 대위(당시 중위)가 쓰러진 정장을 대신하여 지휘권을 행사했는데 이희완 대위는 한쪽 다리를 잃은 상황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휘하여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였다. 이 공으로 이희완 대위는 해군에 현역으로 남게 되었다.

대한민국 해군은 연평해전을 계기로 교전규칙을 소극적 대응에서 적극적 응전 개념으로 수정하였다. "경고방송-시위기동-차단기동(밀어내기 작전)-경고사격-조준격파사격"의 5단계 대응에서 "시위기동-경고사격-조준격파사격"의 3단계 대응으로 개정한바 있다.

5) 이명박 정권시기(2008~ 현재)

(1) 남한의 대북정책

이명박 정부는 소위 좌파정부로 지칭되는 과거 10년의 기간 동안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누르고 새로운 정부로 등장하였다. 과거 10년간의 대북정책과는 달리 대등한 입장에서 상생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유지하고자 한다. 요컨대, 동포라는 개념에서 퍼주기식 대북정책이 아니라 대등한 교환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 있는 통일부 업무보고를 통해 '상생공영정책'을 정부의 공식 대북정책으로 채택하였다. 그리고 2009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신 평화구상'을 제시하고, 9월 미국 방문 길에서는 지난 2년간 교착상태에 놓여 있는 북 핵협상의 해결을 위해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제안한바 있다.

이명박 정부의 '상생공영정책'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뿌리를 두고 있다. 상생공영정책은 대북 봉쇄정책이나 적대정책이 아니고 과거 정책에서 각각 한 단계 더 진화한 것이다. 비핵·개방 3000 구상은 상생공영정책이 추구하는 북한의 변화에 의한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공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현전략이다. 한반도

신 평화구상은 그 같은 전략 아래 “3000” 을 실현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서 대북 지원프로그램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으며, 그랜드 바겐은 “비핵(화)”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협상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2) 북한의 대남전략과 도발사례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끊임없이 무력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 이제는 간첩, 간첩선을 남파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군사적 무력도발을 공공연히 감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남한에는 지난 10년간 뿌린 씨앗으로 좌익성향의 인사들이 공공연하게 북한을 찬양하고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고, 군에는 主敵의 개념도 살아있지 수년이 지나버렸고, 남북이 상호방문을 격의 없이 교류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간첩활동은 별문제가 되지 않는 정도로 정착된 것 같다.

〈표 4〉 이명박 정권시기의 대남도발사건

도발일자	도 발 내 용	결 과
08.7.11	* 금강산 관광객(박왕자) 피격 사망	
08.10.12	*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09.5.25	* 북한, 제2차 핵실험 강행	
09.9.6	* 임진강 댐 무단 방류	
09.11.10	* 대청해전 (3차 연평해전)	
10.1.27	* 서해상에서 남측 향해 해안포 발사	
10.3.26	* 천안함 침몰사건	5월 20일 정부조사 발표
10.5.15	* 북한 경비정 NLL 남측 1마일 해군 경고사격후 퇴각	천안함침몰 50일 만에 발생
10.11.23	* 연평도에 곡사포와 해안포 폭격사건(전쟁에 준함)	천안함 사건이후 8개월 경과

출처: <http://cafe.daum.net/foeverilovepark>

결국 국가의 군사안보문제는 국가가 해결해야 할 초미의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안전을 위하여, 그리고 적화통일을 위하여 무력적인 방법의 도발을 서슴지 않고 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① 임진강 댐 무단방류

북이 임진강을 무단방류한 것이 이번 말고도, 2001년 3월과 10월, 2002년 9월, 2003년 7월, 2005년 9월, 2006년 5월 등 6차례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국민이 그 사실을 거의 모르는 이유는 당시의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이것을 국가기밀이라며 발표를 금지시켰기 때문이라 한다. 그 당시도 모두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데 도대체 국민이 이렇게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정부가 이를 쉬쉬하며 군사기밀로 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국민의 대북감정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국가기밀이라는 엉뚱한 이유를 들어 대북감정악화를 막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을 것으로 추측한다.¹⁷⁾

2009년 9월 6일 새벽 갑자기 불어난 임진강 물길에 야영을 즐기거나 낚시를 하던 우리나라 주민 6명이 행방불명되었고, 하류에서 어획을 위해 쳐 두었던 수억 원 어치의 그물 통발 등이 휩쓸려 떠내려갔다. 이는 임진 강 상류에 특이한 강우량이 없었던 점을 미루어 북한 황강 댐의 예고 없는 수문개방에 의한 일종의 수공으로 추측된다. 이번 사태가 북한의 의도되었던 수공이나 아니면 댐의 붕괴 혹은 기타 원인이냐를 놓고 우리 정부에서는 여러 각도로 그 원인 파악에 나섰다. 물론 원인 파악도 중요하고 그 원인에 따라 북한에 해명을 요구하며 항의도 필요하고 또한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 내는 것도 중요하다. 보도에 의하면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의 황강 댐은 저수량이 무려 3억 톤에 이르는 반면, 우리의 대책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한탄강 댐은 당초 정부 구상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들의 반대에 휘말려 착공이 7년이나 지연되었나, 더욱이 그 규모도 턱 없이 축소되었다. 그리고 임진강 본류에 건설 중인 군남홍수조절 댐도 마찬가지다. 이들이 저장할 수 있는 수량은 고작 7천여 톤에 불과하다.¹⁸⁾ 정부와 수자원 전문가들은 황강댐이 담수(澁水)를 끝내면 북한이 임진강 수자원의 20%를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남한 쪽 임진강 유역의 수자원 관리권을 사실상 북한이 갖는 셈이다. 북한이 하류로 흘러보낼 물을 가뒀다가 예성강으로 보내면 경기 북서부 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17) “북의 임진강댐 방류로 큰 피해를 본 게 ‘군사기밀(?)’”<http://www.todayfocus.kr/jbbs/bbs.html?bcode=comml&mode=view&no=52525>(검색일: 2010.5.22)

18) “북한의 임진강 수공?을 보며”, <http://blog.joins.com/daeyk/11019036>(검색일: 2010.5.22)

② 제3차 연평해전(대청해전)

남북한 해군 함정이 2009년 11월 10일 오전 11시28분께 서해 대청도 인근 해상에서 교전했으나 우리 측 사상자는 없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힌 바 있다. 합참은 이날 "북한 경비정이 서해 대청도 동쪽 6.3마일 지점의 NLL을 침범해 우리 해군이 여러 차례 경고통신을 했으나 경비정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남하했다"면서 "해군은 북측 경비정에 경고사격을 하겠다는 경고통신까지 했으나 물러나지 않자 교전규칙에 따라 경고사격을 가했다"고 말했다. 이에 북한 경비정은 남측 고속정을 향해 '직접사격'을 가했으며 우리 측 고속정은 교전규칙에 의해 '대응사격'을 가했다고 한다. 합참은 "교전 과정에서 우리 측 사상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측 함정은 연기가 날 정도로 반파되어 북한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상에는 우리어선 9척이 있었으나 모두 안전지대로 이동 조치했다. 서해상에서 남북 함정 간 직접적 교전이 발생하는 것은 7년여 만이다. 지난 2002년 6월29일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의, 선제 기습공격으로 제2연평해전이 발생한 바 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 경비정을 향해 4,950여발의 함포를 발사했지만 북한 경비정이 침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리 함정의 경고사격에 이어, 북한 경비정의 조준사격 공격을 받은 우리 해군은 참수리 325정을 비롯한 고속정 2개 편대(4척)의 대응사격과 후방에 있던 초계함 2척의 후속사격으로 이어진 2분간의 교전에서 40mm 함포 25여 발과 20mm 발칸포 4,700여발 등 모두 4,950여발을 발사했으면서도 북한의 경비정을 침몰시키지 못한 것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더구나 2m정도의 파고와 3.2Km에 불과한 거리인데도 격침시키지 못한 것은 격침시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북한으로 하여금 확전의 명분을 주지 않으려는 현장 지휘관의 판단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¹⁹⁾ 대청해전이 있고 난 직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서해함대사령부를 시찰하면서 전투함선에 직접 승선, 무기와 전투기술의 현대화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²⁰⁾

19) "대청해전", <http://blog.chosun.com/blog.log.view.screen?blogId=1837&logId=4316981>(검색일: 2010.5.22)

20)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대청해전 패배 17일만인 작년 11월27일 김정일 위원장이 해군 제587연합부대 지휘부를 시찰했다고 보도했는데 이 부대는 남포시에 위치한 서해함대사령부다.

③ 천안함 침몰사건

2010년 3월 26일에 백령도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초계함인 천안함이 침몰한 사건이다. 사건 발생 직후 출동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해안경비정에 의해 천안함에 탑승하고 있던 승조원 104명 중 58명이 구조되었으며 나머지 46명은 실종되었다. 이후 실종자 수색과 선체 인양이 진행되면서 2010년 4월 24일 17시 현재 실종자 46명 중 40명이 사망자로 확인되었으며 6명이 실종자로 남아 있다. 한편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수색과정에서 3월 30일에는 UDT 대원인 한주호 해군준위가 작업 중 실신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순직하였다. 4월 2일에는 저인망어선 금양98호가 천안함 실종자 수색을 마치고 조업구역으로 복귀하던 중 서해 대청도 서쪽 55km 해상에서 침몰해 탑승 선원 9명 중 2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초기에는 어뢰설, 기뢰설, 내부폭발설, 피로파괴설, 좌초설 등 다양했으나 조사가 진행되면서 점차 좁혀지면서 정부와 민군 합동조사단은 어뢰에 의한 피격설을 제기하고 있으며 좌초설도 제기되었다.

2010년 5월 20일 조사단은 침몰 원인이 북한 어뢰에 의한 공격이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조사단은 발표문에서 어뢰에 의한 수중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로 절단되었으며 가스터빈 실 중앙으로부터 좌현 3m, 수심 6~9m에서 폭발하였고 무기체계는 북한에서 제조한 고성능폭약 250kg 규모의 어뢰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발생해역의 작전환경을 고려할 때 소형잠수함정으로 판단되며 주변국의 잠수함정은 모두 자국의 모 기지 또는 그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반해 서해의 북한 해군기지에서 운용되던 일부 소형잠수함정과 이를 지원하는 모선이 천안함 공격 2~3일 전에 서해 북한 해군기지를 이탈하였다가 천안함 공격 2~3일 후에 기지로 복귀한 것이 확인됐으며 폭발지연 인근에서 수거된 어뢰의 부품들이 북한산 무기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결국 천안함의 침몰은 북한이 자행한 군사도발이라고 결론지었다.²¹⁾

천안함의 침몰을 주도한 북한의 조직은 정찰총국이라는 것을 추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천안함을 공격한 연어급(130t급)잠수정은 북한 해군이 아니라 정찰총국이 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암살하기 위해 납파된 간첩도

21)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정부발표에 대하여 우리 국민은 대체로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아직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 상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천안함 침몰사건”,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0XX469492>(검색일: 2010.5.25).

정찰국 소속이라고 한다. 특히 “1983년 아웅산 테러는 작전국과 정찰국의 합동 작전이었다”고 하며, “천안함 사건도 작전국이 침투를, 정찰국이 무기를 담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④ 연평도 포격사건

북한은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부터 1시간 넘게 서해 연평도에 백 여발의 해안포와 곡사포 공격을 퍼부었다. 이것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정면으로 공격해 온 전쟁에 준하는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연평도 포격(延坪島砲擊)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대한민국의 대연평도를 향해 170여 발을 포격한 사건이다. 이에 대한민국 국군은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고 80여 발의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남측의 경우는 군인 2명이 전사하고 16명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민간인도 2명이 사망, 3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남북 간의 교전 중 민간인이 사망한 것은 한국 전쟁 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국제 사회의 큰 관심을 불러 모았다. 이 사건은 천안함 사건 이후 벌어진 것으로 남북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

천안함 폭침사태이후 8개월 만에, 1953년 휴전 이후 최초로 대한민국 영토를 직접 포격해 군인과 민간인을 살상한 사건이다. 북한의 이번 공격은 서해상의 남북 경계선인 NLL의 무효를 주장하며 과거 여러 차례 서해 5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우도, 그리고 연평도) 인근 해상에 포 공격을 해 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대한민국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이었다. 민간인 거주 지역 공격은 전시에든 국제법이 금지하고 있는 전범(戰犯)행위이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한 구체적인 요인을 짚어 본다면, 우선 북한이 우리농축시설을 공개한 것은 한국과 미국 정부가 ‘비핵화하고 나면 그 때부터 대화하겠다’라는 원칙을 계속 유지하자, 그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입장은 대화하고 나서 비핵화 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대가를 먼저 받아야겠다는 것이다. 화폐개혁이후 북한의 경제상황은 더욱 어려워졌고, 민심도 흉흉해졌으며 동시에 권력이양이라는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경제붕쇄는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그를 타개하기 위한 북한의 여러 카드들도 사실상 한·미 정부에 별 효과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 연평도 포격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요컨대, 궁극적으로는 핵을 대가로 하는 후계세습체제와 정권안정을 구축하고, 경제

적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서 나온 최종적인 결론이 연평해전이나 천안함 사건보다 더 강력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육지도발’ 로서의 ‘연평도 포격’ 이라는 것이다.²²⁾ 이러한 사건은 북한의 도발 양상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첫째는 북한의 도발 강도가 직접적이고 군사적인 방법에 의존하면서 그 강도가 한층 높아졌다는 점이다. 둘째는 북한의 맹방인 중국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면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Ⅲ. 북한의 대남도발의 양상 및 특징과 대응방안의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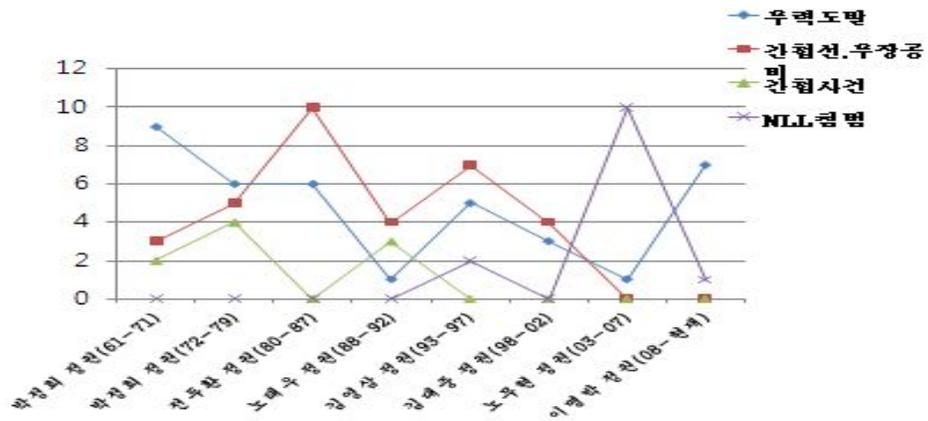
북한이 자행한 천안함 폭침사태는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여전히 북한은 사건 발생 원인을 남한 정부의 “대형 모략극” 이니 “전쟁국면 간주” 라고 억지 주장을 하면서 무력 도발을 자행 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전술한 바 있듯이 1.21무장 공비침투사건(68년), 버마 아웅산 폭탄테러 사건(83년), KAL기 폭파사건(87년),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96년) 등 수 많은 무력도발에 대하여 어느 하나 잘못을 인정한 것이 없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들은 각 정권별로 분석해 본다면 우리 일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선거용 자작극” 이니, “北風공작” 이니 하는 선거성 선전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이 북한의 의도된 계획에 따라 시도 때도 없이 자행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특징으로서는 박정희 정권의 60년대 70년대에는 간첩활동을 통하여 남한 사회의 혼란을 획책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이 당시에는 육상, 해상, 공중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무력도발을 일삼았다. 행태에 있어서도 무장 게리라 침투, 납치, 군사적인 충돌 시도 등 적극적인 형태의 도발을 감행하였다. 특히 70년대에는 한국전쟁이후 최초로 남북대화가 시도된 만큼 표면적인 ‘화해’ 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발은 이루어 졌다. 땅굴을 통한 무력적화야육을 들어냈고, 남한의 대통령을 암살 하려는 특수부대를 남파하는 등 남한 사회의 전복을 위해 무력도발을 감행하였다.

전두환·노태우정권 시기인 80년대에도 무장공비, 간첩 및 간첩선을 남파하여 남한

22) 저자의 입장에서 보면, 연평도 포격이 미국과의 대화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김정운의 업적 쌓기 위함이나 또는 내부결속의 중심을 김정운에게 두기 위한 포석이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포격을 가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사회를 분열시키고자 획책하였고, 이제는 해외에 까지 진출하여 국제적인 무대에서의 테러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였다. 요컨대, 남한의 대통령을 암살하고자 광분하는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김영삼 정권시기에는 간첩활동은 물론이고, 잠수정, 경비정을 이용한 무장공비의 집단적 침투와 납치 및 살해를 자행하였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기에는 북한과의 유화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도발은 그 무력사용의 정도가 노골화되었다. 요컨대, 남북관계가 유화적인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잠수정의 침투, 무장간첩의 침투는 물론이고, 비무장지대충격사건을 비롯하여 제1, 2차 연평해전을 일으키는 무자비함을 보였다. 더욱이 이 시기부터는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 자행되면서 테러집단으로서 국제사회에 본색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이명박 정권의 현 시기에는 핵실험을 비롯하여 미사일 발사 실험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사건과 같이 이제는 국지전에 가까운 무력군사도발을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2〉 정권별 북한의 대남도발사례와 추이

참고: 통계수치는 필자가 주요사례로써 수집 가능한 자료만을 가지고 계산한 것임 (세로축은 건수임). * 미사일 및 핵실험 건수는 제외함.

〈그림 2〉의 통계수치와는 달리 〈표 5〉의 김기령(2008)의 통계에 의하면 김대중 정부 이후 지금까지 북한의 대남도발은 군사도발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침공시도, 위협, 교전의 건수가 48%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NLL침범

등이 33%로써 북한의 도발은 직접적인 군사도발이 자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김정일 시대 대남도발의 유형구분(1998~2010.11)

구분	군 사 도 발(52회)			공 작(2회)			기 타(6회)
유형	침공시도, 위협, 교전(군사력 사용)	휴전선 위반(월경, NLL침범)	무장간첩(선)침투	간 첩, 납치	테러(암살, 폭파)	협박, 위협	기타(핵실험, 어선침범, 관광산 민간인 피격)
횟수(총61회)	29(48%)	20(33%)	4(7%)	1(2%)	0(0%)	1(2%)	6(10%)

출처: 김기령(2008: 67) 수정·보완

이렇게 볼 때, 북한의 도발은 남한의 특수한 상황과 정권에 따라, 그에 대한 조건을 염두에 두고 도발을 자행한다기 보다는 자신들의 계획된 의도에 따라 무차별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이 보다 더 포악한 제2, 제3의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사건이 없으라는 법은 없을 것임에 우리 국민과 정부는 북한의 도발적 테러 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도발은 휴전이후 주로 서해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이 이러한 도발을 자행하는 주요 빌미는 NLL을 부정한다는 것에 빌미와 초점을 두고 자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북한은 서해도발을 노골화 시키고 있으며 옹진반도 일대에 일반정예부대와 특수부대를 밀집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20여만 명의 일반부대(4군단 및 3군단 일부정예병력)와 특수부대로서 6만 명의 해상육전대(백령도 점령임무), 1800여 명의 해상저격여단, 600여 명의 4군단 정찰대대, 600여 명의 해군정찰대대가 집결되어 있음이 보도된 바 있다.²³⁾ 참고로 휴전이후 서해지역을 중심으로 북한이 자행한 주요 도발일지를 요약해 보면, 주로 국경선을 침범과 군사적 무력도발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 “전선 지켜야 평화 지킨다: [2]‘햇볕=평화’는 허구다”, 「조선일보」, 2010년 12월 3일자 A5쪽.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본 남한의 대북정책과 북한의 도발양상의 변화

〈표 6〉 휴전후 북한의 주요 서해 도발일지 요약

도발일자	도발 내용
1956. 11	북 미그기, 서해 상공에서 공군 연습기 2대 습격
1960. 7	인천 앞 바다에서 유엔군 수송선 공격(미군 1명 사망)
1962. 12	연평도 북쪽 해상에서 초계정 포격(승조원 3명 사망)
1967. 1	순찰 중인 해군함 공격, 침몰(승조원 39명 사망)
1973. 10~11	연평·대청·백령도 근해에서 북 경비정 43차례 북방한계선(NLL)침범
1981. 8	북 미그 21기 2대 백령도 상공 침범
1998. 11	북 간첩선 강화도 해안 침투 후 도주
1999. 6	1차 연평해전(남북 함정 교전)
2002. 6	2차 연평해전(남북 함정 교전, 해군장병 6명 전사)
2003. 2	북 미그 19기 1대 연평도 상공 침범
2004. 7	북 경비정 연평도해상 NLL월선(함포사격)
11	북 경비정 3척 연평도 서쪽NLL 월선(경고사격)
2009. 9	북 경비정 백령도 동북쪽 NLL 월선
11	대청해전(남북 함정 교전)
2010. 3	천안함 폭침(백령도 서남쪽 해상)
8	북, 백령도 북쪽 해상에 해안포 발사
11	연평도 포격 도발

자료출처: 국방부; 「조선일보」, 2010.12.3일자 A5참조.

특히, 남한의 대응방안의 모색과 관련하여 북한의 반응에 대하여 가상의 시나리오를 상정해 본다면, 첫째는 지금과 같이 계속 강성적 대북정책을 유지할 것인가. 그렇다면 자체붕괴 또는 전면적으로의 확전을 고려해 볼 수 있겠는가? 둘째는 남한의 중유공급, 식량경제지원의 대가로 대화를 유지하면서 북핵을 동결시키고 평화통일을 유도할 것인가? 아니면 북한의 무력도발에 순응하면서 체제를 유지시켜 줄 것인가? 하는 의문을 던질 수 있겠다. 〈표 7〉은 저자가 가능성을 상정해 본 것이다.²⁴⁾ 따라서 남한의 강·온전략의 구사를 통해서 북한이 강경대응에 나서지 않도록 하면서 전면전과 북한체제의 존속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이 소극적이고 온순한 대응책이 나오도록 하여 통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4) 그러나 통일관련 대전제는 유지되어 저야한다. 첫째, 남·북한은 중간단계를 거쳐서 통일이 되어야 하고, 그것은 자본주의 민주국가로의 흡수통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통일과정은 평화적이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쌍방이 모두 과국을 조래하는 전면전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표 7〉 남·북의 대응의 변화

		북한의 대응	
		强	溫
남한의 대응	强	(I) 모험적 대결 ➔ 전면전 가능성	(II) 남한과 국제사회의 압박과 유인 ➔ 북한의 붕괴, 흡수통일
	溫	(III) 경제적 지원 ➔ 군사적 대응과 허술한 체제유지	(IV) 대화와 타협 ➔ 평화유지, 합의통일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볼 때,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탐색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대북정책을 고수하는 방안이다. 이것은 북한이 알아서 핵을 폐기하고 난 후 도와달라고 하면 그 때부터 대화하는 방법이다(한미정부의 전략에 북한이 백기를 드는 경우). 그러나 이러한 시나리오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경제적으로 허약해진 북한은 중국으로의 종속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거나, 북한정권이 와해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극단적인 강경군부세력이 전쟁을 일어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이판사판형의 자포자기상태에서) 결국 이러한 군사력이 사용되어지는 시나리오는 절대 고려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스스로 알아서 핵을 포기하거나 북아프리카나 중동처럼 민중반란이 일어나 ‘착한 집단’ 이 정권을 장악하여 남한과의 통일을 주장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다. 요컨대, 중국으로 종속화되어 자치권을 인정받는 체제로 갈 것인가(위그루나 티벳자치구처럼), 아니면 남한과의 흡수통일을 모색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둘째, 대화를 통해 북한과의 관계에서 협력과 경계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방안이다. 이것은 미국과의 협조를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균형을 맞추어 북한과의 접촉을 추진해 가는 방안이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 결국은 우리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과 대화를 하기 위한 명분에 근본적인 목적이다.

요약컨대, 어떻든 우리의 대응은 전쟁의 발발 가능성은 최대한으로 줄이면서 또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는 조성해 나가되 대북 경계태세 및 적절한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대응책의 방향은 첫째, 북한의 체제적 특성 및 대남전략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바탕을 둔 대북정책이어야 한다. 둘째, 남북한 관계개선 및 통일 접근은 어디까지나 안보 우선주의에 바탕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북한의 어떠한 무력도발도 억제하고, 무력도발 시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방어하고 어떠한 대응 조치도 취할 수 있는 안보능력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김강령, 1998, 106-107)

마지막으로,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안보문제도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국가 간의 협력 시스템을 공고히 하여 국가 간 다자안보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IV. 결 론

무엇보다도 남한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 동안 북한의 무력적 군사도발에 대한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은 상당히 무감각하고, 안이하고 그리고 단순한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고 본다. 과거 정권 10년간의 친북적 대북정책과 그 정책을 추종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로 인하여 국가안보 의식은 상당히 약화되어 있었다. 이러한 안이한 생각들이 우리 정부와 국민 전체에게 만연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이번 천안함 폭침사태, 연평도 포격사건과 같은 엄청난 피해를 초래한 결과를 낳았다고 본다.

천안함 폭침사태는 대체적으로 북한이 2009년 11월 10일 대청해전 패전(북한의 주장은 표면상으로는 승리했다고 자평하지만)에 대한 보복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실제 북한은 연평해전 패배를 보복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었다. 대청해전 이후 군부 실세들의 보직이동, 김정일의 서해함대 사령부 방문,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부장, 정명도 해군사령관에 대한 승진 조치 등 일련의 정황으로 볼 때 타당한 분석이라고 본다. 문제는 북한의 무력도발이 천안함 사태가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또 북한의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후계문제를 중심으로 본다면, 그들의 선군정치·선군사상의 구현과 후계문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무력도발을 자행할 것임은 명약관하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음에 자행될 북한의 도발을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하여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우리가 지니고 있는 초미의 과제라고 본다. 그 동안 북한이 슬한 도발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제대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한 적이 없다. 이제부터는 우리 정부는 자위권을 선포하고 그 바탕위에서 북한의 책임을 묻는 단호하고 실질적인 조치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극한 대결구도 속에서 승패(勝敗)를 가늠할 때, 존 F. 케네디와 후르시초브의 ‘치킨게임’에서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²⁵⁾ 또 1976년 북한의 ‘판

25) ‘치킨게임’이란 말은 도로의 양쪽 끝에서 두 명의 경쟁자가 차를 몰고 전속력으로 마주보며 달려오다가 충돌직전에 핸들을 꺾는 사람이 지는 경기이다. 이 경기에서는 핸들을 꺾은 사람은 ‘치킨’, 즉 겁쟁이로 낙인찍히게 된다. 하지만 어느 한 쪽도 핸들을 꺾지 않는다면, 둘 다 게임에서는 승자가 되겠지만

문점 도끼만행’ 때 미국은 항공모함 미드웨이 호 전단, 핵 탑재 전폭기와 전투기 수십 대를 한반도에 급파해 결국 김일성의 사과를 받아 낸 사례가 있다. 정부는 이번에 서해에서 대규모 한·미 합동군사훈련, 미 항공모함 전단의 한반도 임시 배치 등 북한이 현실적·심리적 압박을 받을 정도의 군사 대응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²⁶⁾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안착시키고 대한민국의 경제안정과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의미가 있고 국민의 동의도 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윌리엄 코헨(Cohen) 전 미국방장관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도발을 하고 대화를 통해 대가를 챙겨간 뒤 다시 도발을 하는 북한의 ‘로테오쇼’ 는 이미 충분히 봤다. 미국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에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은 없다’ 는 메시지를 전했다”²⁷⁾고 밝힌바 있듯이 북한의 무력도발도 한손에는 대화를 다른 한손으로는 총과 포를 쏘아대는 허구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음을 알아야할 것이다.

만, 결국 충돌하면서 양쪽 모두 끝장을 보게 되는 것이다. 1962년 10월 28일 초강대국 미국과 소련이 전 인류의 생명을 담보삼아 치킨게임을 벌인 즉, 쿠바 미사일 배치문제를 둘러싸고 케네디와 후르시초브 간의 아슬아슬한 게임은 전 세계 인류의 간담을 싸늘하게 하였다. 결국 케네디의 강공(強攻)이 성공을 거두는 사례가 되었다.

26) 최근 한 일간지의 기고란을 보면 “수십 년간 계속된 북한의 도발의지를 확실하게 꺾어 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번의 사태는 한국의 안보상의 중대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잘못하면 우리의 미래를 잃게 될 수도 있고, 잘만 관리하면 오히려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갈 수도 있다고 본다. 역사는 언제나 지혜롭고 용기있는 자의 것이 되어 왔다. 과거 공산권이 쌓은 긴장의 벽을 극복하고 반전(反轉)시킨 레이건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와 용기 그리고 지혜 같은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우리의 의지가 확고할수록 북한의 도발의지는 억제되고 긴장과 경제적 피해도 제한될 것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긴장을 두려워하면 北이 웃는다”, 「조선일보」, 2010년 5월 24일 A31.

27) “도발 후 대가 받고 또 도발...북한 쇼 더는 못 봐”, 「조선일보」, 2011년 10월 13일 A20.

참 고 문 헌

- 강창국. 2009. “북한의 대남 테러리즘 전개와 대응책”, 『군사논단』, 통권 제60호, 한국군사학회.
- 김강령. 1998. “북한의 대남도발과 우리의 대응”, 『국제문제』, 제29권 제9호, 통권337호, 국제문제연구소.
- 김기령. 2008. “남북 화해기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김용호. 2007. “북한 테러리즘과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 김태준. 2006. 테러리즘-이론과 실제, 서울: 봉명.
- 년도별 북괴의 도발일지. <http://cafe.daum.net/jeonwoominjok> (검색일: 2010.5.17).
- 대남도발 일지, <http://cafe.daum.net/realhistory>(검색일: 2010.5.17)
- 대청해전, <http://blog.chosun.com/blog.log.view.screen> (검색일: 2010.5.22).
- 문교부 중앙교육연구원. 1980. 『북괴의 대남도발』 .
- 박현옥. 1998. “북한의 대남도발 반세기,” 『군사논단』, 제14호/제15호.
- 북, NLL침범. 해군 경고사격, <http://cafe.daum.net/foeverilovepark> (검색일: 2010.5.19).
- 북의 임진강댐 방류로 큰 피해를 본 게 군사기밀(?)”<http://www.todayfocus.kr/jbbs/bbs.html> (검색일: 2010.5.22)
- 북한의 대남 도발일지, <http://cafe.daum.net/saynotso> (검색일: 2010.5.17)
- 북한의 대남도발과 테러일지, <http://blog.naver.com/michelin09/19955150> (검색일: 2010.5.17).
- 북한의 임진강 수공을 보며, <http://blog.joins.com/daeyk/11019036> (검색일: 2010.5.22).
- 임희섭. 1979. 『우리시대의 테러리즘』, 서울: 중앙일보사.
- 장수련. 2000. “북한의 대남전략과 도발실태”, 『월간북한』, 제342호, 북한연구소.
- 조선일보. 2010.4.24. “북, 대청해전 패전후 강경노선 급선회”.
- _____. 2010.5.22. “국제사회는 북 비난에 공동 보조, 그러나 한국 정치권은”.
- _____. 2010.5.22. “北 작전국이 침투, 경찰국이 무기담담”.
- _____. 2010.5.24. “긴장을 두려워하면 北이 웃는다”.
- _____. 2010.10.13. “도발 후 대가받고 또 도발...북한 쇼 더는 못 봐”.
- _____. 2010.10.15. “김정남, 訪中 김정일에 ‘천안함’ 항의”.
- _____. 2010.10.16. “김정은과 함께 생긴 일들”.
- _____. 2010.12.3. “전선 지켜야 평화 지킨다: [2]‘햇볕=평화’는 허구다”.
- 최진태. 1997. 『테러·테러리스트 & 테러리즘』, 서울: 대영문화사.

천안함 사태로 본 북한해군의 잠수함과 잠수정 정보, <http://polinlove.tistory.com>(검색일: 2010.5.20).

천안함 침몰사건,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0XX469492>(검색일: 2010.5.25)

통일원. 1995. 『북한개요』 .

CRS보고서. 2003. “북한 도발연표(1950-2003),” 『한국논단』 .

6.25전쟁과 북한의 대남도발 사례, <http://cafe.daum.net/skorva/6xpv/665> (검색일: 2010.05.10).

전 신 욱(全信旭) :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한국산업화과정에서의 노동통제와 노동저항」, 1989), 서경대학교 대학원장(행정학전공 교수)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북한 및 통일 문제, 노동 및 여가정책이며, 저서로는 「한국정책연구」, 「민족통일과 북한」, 「북한학 입문」, 「노동행정론」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 “한국의 노동통제정책과 저항의 변화”, “연해주 韓人의 중앙아시아로의 강제이주와 정착 그리고 사회·경제적 현황”, “노동조건의 변화와 여가정책”, “북한의 노동정책”, 등이 있다. 현재 한국보훈학회 부회장과 한국정책과학학회 고문직(前 會長)을 맡고 있다. (swchun@skuniv.ac.kr)

논문투고일: 2011. 10. 11 / 심사일: 2011. 11. 13 / 게재 확정일: 2011. 11. 22

The cases and countermeasures on North Korean provocation to South Korea as a momentum on the bombardment to Yeonphyeong Island.

chun, shin wook

The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is mounting as a result of North Korea's deadly attack near Baeknyeong island in the West Sea on the South Korean patrol ship Cheonan in March 26, 2010 and the bombardment to a private citizen's place of residence at Yeonphyeong Island on November 23, 2010. Cheonan ship incident reminds our people and three neighbors(S. Korea, Japan, China) that North Korea can also impede regional cooperation by causing security problems. President Lee Myung-bak proclaimed officially and internationally that the sinking incident of Cheonan ship is the provocation of North Korea to attack on South Korea on May 24, 2010. North Korea has committed continuous attempts of the military provocation and maneuver to break South Korea without hesitation. An unexpected and periodical repetition of provocation is not only to grasp an alert of Korean combat unit but also to check an ability of risk management, including the countermeasures, rationality and agility of the high-level military policy making process. On the other hand, the provocation of North Korea has a tactical intention on the national psychological level and terrorism to South Korea. If North Korea abandon or cease the violent struggle, they know to weaken the hostility to South Korea, also is to raise the level of provocation and maneuver in order to get over the difficulties of a violent revolution.

Key words: the military provocation and maneuver, an armed espionage agent, armed communist guerilla, the Northern Limit Line, the bombardment to Yeonphyeong Island